

“110년 된 종이인감, 디지털인감으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7차 민생 토론회

“1500개 행정서류 전산화 비대면 진료제한 불편·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의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흠여져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윈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했다.

이어 “큰 기업은 행정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라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의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목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이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윤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

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이제 국가가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

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더 빨라져야 하고 국민의 삶과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윤, 취임 이후 9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 쌍특검법 재표결 관심

임시국회가 2월 19일부터 진행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속칭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할지,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 달 1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작고, 2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가 예상된다. 아울러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의결 안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다음달 1일 처리하자”

윤재욱 원내대표, 민주당에 제안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30일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1일 본회의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중재에 나선 상태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 전보건강’ 설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가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면서 “그 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게 됐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어서 결국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국민의 예

정된 갈등을 뺀히 보는 것보다,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법안 자체가 특조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독소 조항이 있고 국회의장이 중재해 여야 협상이 90% 가까이 이뤄진 안(案)하고도 훨씬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전례 없던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린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린인더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